

<http://dx.doi.org/10.17703/JCCT.2023.9.4.51>

JCCT 2023-7-6

## 결혼과 출산 간의 관계에서 거주지 선택의 조절 효과 검증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광역화 관점에서 -

### Moderating Effect of Residential Sele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and Childbirth - From Perspective of Regional Integration against Local Extinction -

이수창\*, 김대찬\*\*

Soo-Chang Lee\*, Dae-Chan, Kim\*\*

**요약** 본 연구는 결혼과 출산 간의 인과적 구조에서 거주지 선택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여 거주지 선택이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초혼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역량, 주거 안정성, 지역 규모, 지역의 경제 상황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재혼 및 외국인과의 결혼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역량, 주거 안정성, 지역 규모와의 상호작용이 출산에 조절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분석 결과는 결혼 부부가 거주지로 농어촌 지역보다는 중소도시 및 대도시로 선택할 경우가 출산 의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혼과 출산 간의 관계에서 거주지 선택의 조절 효과를 근거로 광역화를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현재의 결혼 부부 농어촌 지역으로서의 거주 회피 현상은 광역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결혼, 출산, 거주지 선택, 인구 감소, 지방소멸, 광역화

**Abstract**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dential sele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and childbirth.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nteractions of first marriage with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for public services, residential stability, the scale of the region, and local economic situation have a moderating effect on childbirth. Interactions of remarriage and marriage with foreigners with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for public services, residential stability, and the scale of the region have a moderating effect on childbirth. These results indicate that when married couples choose to reside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or large cities rather than rural areas, it can more positively affect their intention to have children. While there may be a logical argument against advocating for regional integration ba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dential sele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and childbirth,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 phenomenon of married couples avoiding rural areas can contribute to raising the need for regional integration.

**Key words** : Marriage, Childbirth, Residential Selection, Population Decline, Local Extinction, Regional Integration

\*정회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기획단 수석부단장 (제1저자)

\*\*정회원, 경운대학교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5월 16일, 수정완료일: 2023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23년 7월 1일

Received: May 30, 2023 / Revised: May 30, 2023

Accepted: July 1, 2023

\*\*Corresponding Author:hjkdc1273@naver.com

Liberal arts School, Kyungwoon University, Korea

## I. 서론

한국의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한 우려는 사회·경제적 측면과 아울러, 교육, 국방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미 오래전에 예측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자각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위원회 등과 같은 조직 구축과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사실상 출산율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는 현 정부의 자평 아닌 자평을 내놓거나 일부 정치인은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을 쏟아 내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관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본 연구는 출산과 관련해서 저차원적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개념인 결혼과 거주지 선택에 연구적 초점을 두고자 한다.

사회 통념상 결혼해야 출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은 가족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물론, 결혼하였지만 아이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결혼하고도 출산계획이 없는 부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출산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결혼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 결혼하여 어디에 살 것인가의 문제 즉, 거주지 선택은 출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 부부의 도시로의 거주 선택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켜 온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결혼 부부의 농어촌 지역으로의 거주 회피 현상에 대한 원인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해결책 모색 차원에서 별 실익이 없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원인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현재 수준 또는 심지어 현재 수준보다 더 낮을 경우, 농어촌 지역의 소멸이라는 우려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지금보다 더 개선된 출산장려정책이 추진되더라도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출산은 결혼한 부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결혼한 부부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고자 한다면, 농어촌 지역이 소멸할 수 있음을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결혼 부부의 도시로의 거주지 선택은 불가피한 현상일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가족 삶을 고

려할 때,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결혼한 부부의 거주지 선택이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결혼과 출산 간의 인과적 구조에서 부부의 거주지 선택이 출산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을 비교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거주지별 출산율 차이가 거주지 선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런 연구적 노력은 저출산,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저출산과 지방소멸에 관한 접근 시각을 달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이론적 고찰

### 1. 거주지 선택 이론

거주지란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가족 단위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머물 장소를 의미한다. 이는 도시, 농어촌 등과 같은 지역을 의미할 수도 있고 주택, 아파트 등과 같은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전자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거주지 선택은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개인 혹은 가족의 삶과 생활 방식, 가족 규모, 직장과의 거리, 교육 및 문화 여건, 교통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Bassett와 Short(1980)는 거주지 선택에 관한 기존 연구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대분류하고 하였다[1].

첫째, 시카고학파는 20세기 초반에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한 학파로 인류학과 생태학 등의 지식을 도입하여 도시의 사회와 공간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시카고학파는 인종, 경제적 지위, 직업 등의 사회적 차원과 거주 지역의 공간적 패턴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효용의 극대화, 소비자 선택을 중심으로 한 신고전경제학을 들 수 있다. 신고전경제학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가진 자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거주지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거주지 선택은 소비자 선택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듯이, 거주지 선택에서도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셋째, 제도적 접근(Institutional Approach)은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거주지 선택은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도뿐만 아니라, 거주지의 법적, 정책적, 제도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거주지의 주택시장은 거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종류와 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끝으로, 역사적 유물론에 기초한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은 거주지 선택에 대해 물질적 조건과 역사적 변화를 강조한다. 즉, 개인의 거주지 선택은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 2. 거주지 선택과 결혼 및 출산 간의 관계

거주지 선택과 출산 간의 관계에 관한 기존 문헌에서는 거주지의 지역적, 물리적 환경이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2, 3]. 출산을 위한 거주지 생활 여건은 출산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택 조건, 직장과의 근접성 등과 같은 조건은 결정적인 조건으로 인식되었다[4, 5]. 거주지로 선택된 지역의 주택 여건과 출생률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6, 7]는 여러 나라에서 검증되었다. 가족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농어촌 지역을 거주지로 선택하는 것과 출생률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8, 9]도 이루어졌다.

결혼한 부부가 맞벌이할 경우, 직장까지의 거리에 따라 출산 의사 결정의 차이가 없다는 주장[10, 11]이 있지만, 장거리 출퇴근하는 여성은 출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있다[12]. 직장을 다니는 기혼 여성은 출산을 미루거나 출산계획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아이의 양육 조건 즉 교육, 보건 등의 지역 여건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지원도 출산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시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에는 도시를 벗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13]. 이는 출산을 위한 조건이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유리할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젊은 부부의 삶이 도시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점도 무시될 수 없는 요인일 것이다. 젊은 부부가 출산한 후에는 도시 지역으로의 이동은 심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양육 조건 때문이다[14, 15].

거주지 선택과 결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거주지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다. 거주지 선택에서 있어서 부부간의 이견 조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16]도 있고, 가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공간 요구 충족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17]. 거주지 선택과 결혼 간의 상호작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는 듯하다. 이런 상호작용은 가족 규모의 증가, 교육, 직장 등의 사항, 가족과 관련된 사항, 주거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16, 17].

## III. 분석 결과

### 1. 변수 선정

본 연구는 결혼과 출산 간의 관계에서 거주지 선택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결혼은 초혼, 재혼, 그리고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현재 국가 통계포털에서도 결혼의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의 건수를 측정하기 위해 초혼 건수, 재혼 건수, 외국인과의 결혼 건수를 선정하였으며, 국가 통계포털에서 제시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거주지를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지역적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이미 언급하였다. 이에 거주지를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하고 다시 도시를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구분하였다. 한국의 행정구역 혹은 자치 구역에 의하면, 광역시와 일반시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거주지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도시를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런 거주지 유형을 분석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을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분석하는 것은 통계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조절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선택과 결혼 간의 상호작용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주지 유형의 더미변수 값과 결혼 측정값을 곱하는 것은 분석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주지별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요인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에서 언급된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수혜, 지역 규모, 주택 조건, 양육 조건, 직장 등을 대변할 수 있는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후 거주지 선택이 출산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비교하여 설명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을 구분하고 비교하기 위한 변수로 다음과 같은 것을 활용하였

다. 첫째,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재정적 역량을 비교하기 위해 지방재정자립도를 활용하였다. 둘째, 주거의 안정성을 비교하기 위해 주택보급률을 선정하였다. 셋째, 지역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인구 규모를 활용하였다. 넷째, 유아 교육여건을 비교하기 위해 유치원 수를 선정하였다. 끝으로,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 사업체 종사자 수를 활용하였다. 변수의 측정치로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제시된 통계자료가 활용되었다.

## 2. 분석 결과

### 1) 변수의 추이 변화 분석

본 연구는 결혼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서 부부 거주지 선택의 조절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결혼을 초혼, 재혼, 그리고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였으며, 거주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결혼과 출산이 시계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신생아 출산수는 468,291명에서 2021년 260,213명으로 10년 만에 거의 절반 수준인 208,000여 명이 감소하였다. 초혼 건수는 2011년 252,698건에서 2021년 146,251건으로 거의 절반 수준인 106,447여 건이 감소하였다. 통계자료는 초혼이 감소한 만큼 신생아 출산도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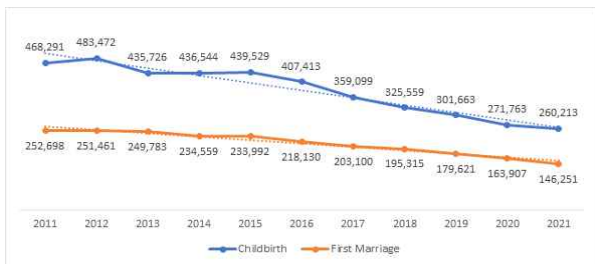


그림 1. 출생 수와 초혼 수의 변화  
 Figure 1. Changes in Numbers of Childbirth and First Marriage

재혼 및 외국인과의 결혼 변화를 보면, 2011년 재혼 건수는 36,786건에서 2021년 24,431건으로 10년 만에 거의 1/3만큼인 12,300여 건이 감소하였다. 외국인과의 결혼 건수는 2011년 32,206건에서 2021년 14,931건으로 거의 절반이 넘는 17,200여 건이 감소하였다.



그림 2. 재혼과 외국인과의 결혼 수의 변화  
 Figure 2. Changes in Numbers of Remarriage and Intercultural Marriage

위에 언급된 통계자료는 결혼의 감소가 신생아 출생률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위의 데이터는 결혼과 신생아 출산 간에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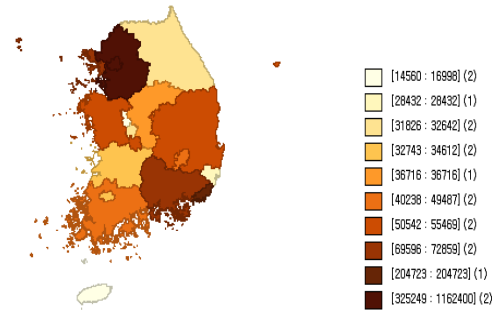


그림 3.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신생아 출산 수 합계  
 Figure 3. Total Number of Childbirths from 2018 to 2021

그림 3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7개 시도의 신생아 출산 수의 합계를 색깔의 농도에 따라 차이를 표시한 것이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의 신생아 출산 수의 합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반면에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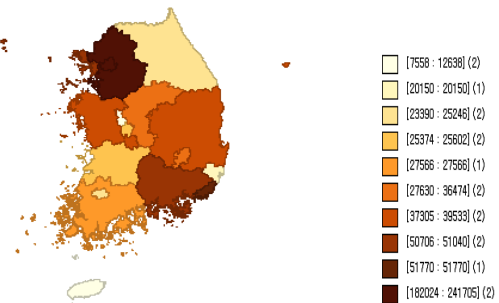


그림 4.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결혼 건수 합계  
 Figure 4. Total Number of Marriages from 2018 to 2021

그림 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7개 시도의 결혼 건수의 합계를 색깔의 농도에 따라 차이를 표시한 것이다.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의 결혼 건수의 합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반면에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분석 자료

본 연구는 1998년부터 시작된 저출산장려정책이 시작되었지만, 정책적 효과 측면에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현 정부의 자평은 저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현재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선정해야 하나,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특정 기간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 기간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는 출산율이 2018년부터 1.0대 이하로 하락하기 시작한 시기이며, 이 기간의 데이터가 잠재적 결혼 인구의 출산과 거주지 선택에 관한 그들의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자료는 229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수집되었다. 분석자료 중 재혼 건수의 경우, 여성의 나이를 43세까지로 제한하였다. 이는 국가통계포털에 여성의 출산 연령이 44세까지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집된 자료 중에서 결측치가 포함된 4개 도시를 제외한 225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 기간 중 초혼의 평균 건수는 963.55건(표준편차 1,086.61건), 재혼의 평균 건수는 146.90건(표준편차 138.99건), 외국인과의 결혼 평균 건수는 102.09건(표준편차 107.20건), 그리고 출생 평균 수는 1,239.49명(표준편차 1,348.62명)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자료에서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났음을 볼 때, 이는 거주지 간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결혼한 부부가 거주하는 지역을 비교하기 위해 선정된 변수값을 보면,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을 의미하는 지방재정자립도의 평균은 20.14%(표준편차 11.99%)로 조사되었다. 거주지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주택보급률의 평균은 14.66%(표준편차 1.58%), 지역의 규모를 의미하는 인구의 평균은 55,954.07명(표준편차 55,739.88명), 유아의 교육

여건을 의미하는 유치원 수의 평균은 9.49개(표준편차 8.43개), 그리고 지역의 경제 상황을 의미하는 사업체 종사자의 수 평균은 25,679.72명(표준편차 28,090.88명)으로 나타났다. 지역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 지역 규모, 유아의 교육여건, 그리고 지역의 경제 상황에서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 분석자료의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Data (N=225)

Variables	Mean	SD
Number of First Marriage	963.55	1086.61
Number of Remarriage	146.90	138.99
Number of Intercultural Marriage	102.09	107.20
Number of Childbirth	1239.49	1348.62
Financial Capacity for Public Services*(Financial Self-sufficiency)	20.14	11.99
Residential Stability*(Rate of Home Ownership)	14.66	1.58
Size of Region(Population)*	55954.07	55739.88
Educational Opportunities of Preschoolers*((Number of Preschool)	9.49	8.43
Economic Situation of Region*(Number of Employees)	25679.72	28090.88

\*: 거주지 비교(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를 위한 변수

거주지 유형별 자료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도시의 경우, 초혼의 평균은 1,393.63건, 재혼의 평균은 162.56건, 외국인과의 결혼 평균은 134.05건, 그리고 신생아 출산 수의 평균은 1,624.74명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재정적 역량을 의미하는 지방재정자립도의 평균은 23.61%, 주거의 안정성의 의미하는 주택보급률의 평균은 13.65%, 지역 규모를 의미하는 인구의 평균은 75,675.69명, 유아 교육여건을 의미하는 유치원 수의 평균 9.29개, 그리고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의미하는 사업체 종사자의 수 평균은 37214.26명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소도시의 경우, 초혼의 평균은 1,381.31건, 재혼의 평균은 235.43건, 외국인과의 결혼 평균은 150.24건, 그리고 신생아 출산 수의 평균은 1,902.55명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재정적 역량을 의미하는 지방재정자립도의 평균은 26.52%, 주거의 안정성의 의미하는 주택보급률의 평균은 14.57%, 지역 규모를 의미하는 인구의 평균은 81,161.49명, 유아 교육여건을 의미하는 유치원 수의 평균 11.58개, 그리고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의미하는

사업체 종사자의 수 평균은 34,997.12명으로 나타났다.

셋째, 농어촌의 경우, 초혼의 평균은 132.68건, 재혼의 평균은 43.33건, 외국인과의 결혼 평균은 23.2건, 그리고 신생아 출산 수의 평균은 206.37명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재정적 역량을 의미하는 지방재정자립도의 평균은 10.42%, 주거의 안정성의 의미하는 주택보급률의 평균은 15.73%, 지역 규모를 의미하는 인구의 평균은 11,803.51명, 유아 교육여건을 의미하는 유치원 수의 평균 7.59개, 그리고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의미하는 사업체 종사자의 수 평균은 5,283.10명으로 나타났다.

표 2. 거주지 유형별 자료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of Types of Residence

	Metropolitan Areas(N=73)	Urban Areas(N=76)	Rural Areas(N=76)
	M(SD)	M(SD)	M(SD)
V1	1393.63(808.95)	1381.31(1354.29)	132.68(87.37)
V2	162.56(80.54)	235.43(178.70)	43.33(22.16)
V3	134.05(79.28)	150.24(135.84)	23.2(13.95)
V4	1624.74(900.29)	1902.55(1722.29)	206.37(127.23)
V5	23.61(10.77)	26.52(12.24)	10.42(4.42)
V6	13.65(1.78)	14.57(.96)	15.73(1.16)
V7	75675.69(37341.49)	81161.49(70094.30)	11803.51(5462.39)
V8	9.29(5.20)	11.58(11.05)	7.59(7.48)
V9	37214.26(28464.76)	34997.12(30479.44)	5283.10(3302.09)

V1: Number of First Marriage, V2: Number of Remarriage, V3: Number of Intercultural Marriage, V4: Number of Childbirth, V5: Financial Capacity for Public Services, V6: Residential Stability, V7: Size of Region, V8: Educational Opportunities of Preschoolers, V9: Economic Situation of Region

3) 결혼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거주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선택과 결혼 간의 상호작용이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거의 모든 데이터에서 표준편차가 커서 데이터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모든 데이터를 로그로 치환하여 분석하였다.

표 3. 결혼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Table 3. Effect of Marriage on Childbirth

	B	SE	$\beta$	t
First Marriage	.824	.122	.882	6.740**
Remarriage	.372	.141	.154	2.638**
Intercultural Marriage	.335	.169	.059	1.982*
R-sq: .734, F:203.715, p:.000				

\*p<0.05, \*\*p<0.01

결혼 유형인 초혼, 재혼, 외국인과의 결혼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초혼과 재혼은 유의수준 0.01에서 그리고 외국인과의 결혼은 유의수준 0.05에서 출산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초혼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거주지 선택과 초혼 간의 상호작용 효과

거주지 선택과 초혼 간의 상호작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초혼과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역량의 상호작용은 유의수준 0.05에서 출산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1에서 초혼과 주거 안정성의 상호작용, 초혼과 지역 규모의 상호작용, 그리고 초혼과 지역의 경제 상황의 상호작용이 각각 출산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과 유아 교육여건의 상호작용은 출산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래 표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를 보면,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역량, 주거 안정성, 지역 규모, 그리고 지역의 경제 상황의 조절 효과에 대한 95% 신뢰구간의 LLUI과 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절 효과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초혼과 거주지 선택의 조절 효과 검증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First Marriage and Residential Selection

	Coeff	se	t	p	LLUI	ULCI
First Marriage×X1	.520	.258	2.013	0.45	-1.028	-.011
R-sq: .005, F:4.053, p:0.45						
First Marriage×X2	.437	.109	4.009	.000	.023	.039
R-sq: .025, F:24.413, p:.000						
First Marriage×X3	.154	.030	5.016	.000	-.215	-.094
R-sq: .025, F:25.161, p:.000						
First Marriage×X4	.053	.071	.742	.459	-.088	.198
R-sq: .002, F:.551, p:.459						
First Marriage×X5	.136	.031	4.332	.000	-.198	-.074
R-sq: .021, F:18.762, p:.000						

X1: Financial Capacity for Public Services, X2: Residential Stability, X3: Size of Region, X4: Educational Opportunities of Preschoolers, X5: Economic Situation of Region

본 연구는 조절 효과가 존재하는 변수를 토대로, 조절 변수의 조건부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가정한 결혼 부부의 거주지 선택이 신생아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 역량의 경우, 표준편차 2.2473 이하에 해당하는 45개 지역(대도시 1개, 중소도시 2개, 농어촌 42개)은 재정적 역량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출산은 0.996만큼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평균 2.8339를 포함한 2.2474와 3.4203의 구간에 있는 139개 지역(대도시 62개, 중소도시 43개, 농어촌 34개)은 재정적 역량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출산은 0.809만큼, 그리고 표준편차 3.4204 이상에 해당하는 31개 지역(대도시 10개, 중소도시 31개)은 재정적 역량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출산은 0.766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 안정성의 경우, 표준편차 2.5661 이하에 해당하는 33개 지역(대도시 27개, 중소도시 5개, 농어촌 1개)은 주거 안정성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출산은 0.983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2.6795를 포함한 2.5662와 2.7928의 구간에 있는 60개 지역(대도시 22개, 중소도시 28개, 농어촌 10개)은 주거 안정성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출산은 1.259만큼, 그리고 표준편차 2.7929 이상에 해당하는 132개 지역(대도시 24개, 중소도시 43개, 농어촌 65개)은 주거 안정성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출산은 1.443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규모의 경우, 표준편차 9.3655 이하에 해당하는 50개 지역(대도시 2개, 중소도시 3개, 농어촌 45개)은 지역규모가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출산은 0.557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0.4269를 포함한 9.3656과 11.4885의 구간에 있는 63개 지역(대도시 10개, 중소도시 22개, 농어촌 31개)은 지역규모가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출산은 0.367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준편차 11.4884 이상에 해당하는 112개 지역(대도시 61개, 중소도시 51개)에서는 지역 규모의 조건부 조절 효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끝으로, 지역 경제적 상황의 경우, 표준편차 8.5056 이하에 해당하는 44개 지역(대도시 1개, 중소도시 2개,

표 5. 초혼과 상호작용한 조절 변수의 조건부 효과  
 Table 5. Conditional Effect of Focal Predictor at Values of Moderator

Financial Capacity for Public Service	Effect	se	t	p	LLUI	ULCI
2.2474	.996	.101	9.897	.000	.798	1.194
2.8339	.809	.035	23.356	.000	.740	.877
3.4204	.766	.040	19.222	.000	.687	.844
Residential Stability	Effect	se	t	p	LLUI	ULCI
2.5661	.983	.033	28.683	.000	.914	1.051
2.6795	1.259	.035	35.982	.000	1.189	1.328
2.7929	1.443	.051	27.900	.000	1.340	1.546
Size of Region	Effect	se	t	p	LLUI	ULCI
9.3655	.557	.100	5.545	.000	.359	.756
10.4269	.367	.096	3.881	.000	.177	.557
11.4884	.193	.105	1.845	.066	-.013	.401
Economic Situation of Region	Effect	se	t	p	LLUI	ULCI
8.5056	.982	.100	9.813	.000	.785	1.179
9.6057	.786	.093	8.435	.000	.603	.970
10.7058	.649	.101	6.427	.000	.573	.848

농어촌 41개)은 지역 경제적 상황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출산은 0.982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9.6057을 포함한 9.6056과 10.7057의 구간에 있는 114개 지역(대도시 56개, 중소도시 53개, 농어촌 35개)은 지역 경제적 상황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출산은 0.786만큼, 그리고 표준편차 10.7058 이상에 해당하는 37개 지역(대도시 16개, 중소도시 21개)은 지역 경제적 상황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출산은 0.649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거주지 선택과 재혼 간의 상호작용 효과

거주지 선택과 재혼 간의 상호작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재혼과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역량의 상호작용 그리고 재혼과 주거 안정성의 상호작용은 출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1에서 재혼과 지역 규모의 상호작용이 출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과 유아 교육여건 그리고 재혼과 지역 경제적 상황 간의 상호작용은 출산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역량, 주거 안정성, 그리고 지역 규모의 조절 효과에 대한 95% 신뢰구간의 LLUI와 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절 효과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재혼과 거주지 선택의 조절 효과 검증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Remarriage and Residential Selection

	Coeff	se	t	p	LLUI	ULCI
Remarriage×X1	.770	.360	2.138	.034	1.380	1.439
	R-sq: .005, F:3.406, p:.064					
Remarriage×X2	1.046	.523	2.000	.047	.015	2.076
	R-sq: .006, F:3.998, p:.047					
Remarriage×X3	.193	.040	4.812	.000	-.272	-.114
	R-sq: .025, F:23.152, p:.000					
Remarriage×X4	.026	.060	.427	.670	-.092	.114
	R-sq: .000, F:.183, p:.670					
Remarriage×X5	.049	.067	.733	.464	-.083	.180
	R-sq: .021, F:18.762, p:.000					

X1: Financial Capacity for Public Services, X2: Residential Stability, X3: Size of Region, X4: Educational Opportunities of Preschoolers, X5: Economic Situation of Region

본 연구는 조절 효과가 존재하는 변수를 토대로, 조절 변수의 조건부 효과를 살펴보았다.

첫째,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 역량의 경우, 표준편차 2.2473 이하에 해당하는 45개 지역(초혼

과 동일)은 재정적 역량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출산은 1.281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2.8339를 포함한 2.2474와 3.4203의 구간에 있는 139개 지역(초혼과 동일)은 재정적 역량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출산은 1.039만큼, 그리고 표준편차 3.4204 이상에 해당하는 31개 지역(초혼과 동일)은 재정적 역량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출산은 0.984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 안정성의 경우, 표준편차 2.5661 이하에 해당하는 33개 지역(초혼과 동일)은 주거 안정성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출산은 0.9852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2.6795를 포함한 2.5662와 2.7928의 구간에 있는 60개 지역(초혼과 동일)은 주거 안정성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출산은 0.974만큼, 그리고 표준편차 2.7929 이상에 해당하는 132개 지역(초혼과 동일)은 주거 안정성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출산은 1.075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규모의 경우, 표준편차 9.3655 이하에 해당하는 50개 지역(초혼과 동일)은 지역규모가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출산은 0.258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의 경우 지역규모의 조건부 조절 효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재혼과 상호작용한 조절 변수의 조건부 효과  
 Table 7. Conditional Effect of Focal Predictor at Values of Moderator

Financial Capacity for Public Service	Effect	se	t	p	LLUI	ULCI
2.2474	1.281	.142	8.965	.000	.999	1.562
2.8339	1.039	.055	18.706	.000	.930	1.149
3.4204	.984	.062	15.843	.000	.862	1.107
Residential Stability	Effect	se	t	p	LLUI	ULCI
2.5661	.852	.083	10.317	.000	.690	1.015
2.6795	.974	.055	17.785	.000	.856	1.082
2.7929	1.075	.074	14.597	.000	.929	1.220
Size of Region	Effect	se	t	p	LLUI	ULCI
9.3655	.258	.128	2.018	.045	.006	.501
10.4269	.020	.119	.171	.864	-.214	.255
11.4884	-.196	.128	-1.528	.128	-.449	.057

5) 거주지 선택과 외국인과의 결혼 간의 상호작용 효과  
 거주지 선택과 외국인과의 결혼 상호작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외국인과의 결혼과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역량의 상호작용, 외국인과의 결혼과 주거 안정성의 상호작용, 그리고 외국인과의 결혼과 지역 규모의 상호작용이 각각 출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과의 결혼과 유아 교육여건 그리고 외국인과의 결혼과 지역 경제적 상황 간의 상호작용은 출산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역량, 주거 안정성, 그리고 지역 규모의 조절 효과에 대한 95% 신뢰구간의 LLUI와 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절 효과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외국인과의 결혼과 거주지 특성의 조절 효과 검증  
 Table 8. Moderating Effect of Intercultural Marriage and Residential Selection

	Coeff	se	t	p	LLUI	ULCI
Intercultural Marriage×X1	.184	.043	4.291	.000	-.268	-.099
R-sq: .025, F:18.416, p:0.00						
Intercultural Marriage×X2	1.392	.380	3.663	.000	.642	2.141
R-sq: .018, F:13.419, p:0.00						
Intercultural Marriage×X3	.145	.035	4.103	.000	-.215	-.075
R-sq: .018, F:16.832, p:0.00						
Intercultural Marriage×X4	.008	.051	.158	.875	-.092	.108
R-sq: .000, F:0.025, p:0.875						
Intercultural Marriage×X5	.018	.052	.337	.736	-.085	.120
R-sq:0.000, F:1.14, p:0.736						

X1: Financial Capacity for Public Services, X2: Residential Stability, X3: Size of Region, X4: Educational Opportunities of Preschoolers, X5: Economic Situation of Region

본 연구는 조절 효과가 존재하는 변수를 토대로, 조절 변수의 조건부 효과를 살펴보았다.

첫째,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 역량의 경우, 표준편차 2.2473 이하에 해당하는 45개 지역(초혼과 동일)은 재정적 역량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출산은 0.888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2.8339를 포함한 2.2474와 3.4203의 구간에 있는 139개 지역(초혼과 동일)은 재정적 역량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출산은 0.694만큼, 그리고 표준편차 3.4204 이상에 해당하는 31개 지역(초혼과 동일)은 재정적 역량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출산은 0.541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 안정성의 경우, 표준편차 2.5661 이하에 해당하는 33개 지역(초혼과 동일)은 주거 안정성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출산은 0.741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2.6795를 포함한 2.5662와 2.7928의 구간에 있는 60개 지역(초혼과 동일)은 주거 안정성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출산은 0.903만큼, 그리고 표준편차 2.7929 이상에 해당하는 132개 지역(초혼과 동일)은 주거 안정성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출산은 1.037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 규모의 경우, 표준편차 9.3655 이하에 해당하는 50개 지역(초혼과 동일)은 지역 규모가 “1” 표



준편차 증가할 때 출산은 0.367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의 경우 지역 규모의 조건부 조절 효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9. 외국인과의 결혼과 상호작용한 조절 변수의 조건부 효과  
 Table 9. Conditional Effect of Focal Predictor at Values of Moderator

Financial Capacity for Public Service	Effect	se	t	p	LLUI	ULCI
2.2474	.888	.143	6.230	.000	.607	1.169
2.8339	.694	.139	4.987	.000	.420	.969
3.4204	.541	.147	3.681	.000	.251	.830
Residential Stability	Effect	se	t	p	LLUI	ULCI
2.5661	.741	.063	11.767	.000	.617	.865
2.6795	.903	.048	18.954	.000	.809	.997
2.7929	1.037	.062	16.785	.000	.915	1.159
Size of Region	Effect	se	t	p	LLUI	ULCI
9.3655	.367	.110	3.352	.001	.151	.583
10.4269	.118	.103	1.835	.068	-.014	.391
11.4884	.026	.112	.229	.819	-.195	.246

####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결혼과 출산 간의 인과적 구조에서 거주지 선택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결혼한 부부의 거주지 선택이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서 제시된 거주지 선택의 조절 효과를 토대로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혼의 경우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역량, 주거 안정성, 지역 규모, 그리고 지역의 경제 상황이 조절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역량, 지역 규모, 그리고 지역의 경제 상황의 경우, 평균 이상의 지역에 비해 평균 이하의 지역에서 조건부 조절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역량, 지역 규모, 그리고 지역의 경제 상황이 좋은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결혼에 의한 출산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거지 안정성의 경우, 평균 이하의 지역보다 평균 이상의 지역이 더 큰 조절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이 평균 이상의 지역에 해당하여,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이 더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거지 안정성은 결혼 부부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거주지 선택의 조건임을 감안할 때, 다른 조건에 비해 조건부 조절 효과가 큰 것은 당연한 분석의 결과로 보인다.

둘째, 재혼의 경우,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역량, 주거 안정성, 그리고 지역 규모가 조절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역량은 평균 이상의 지역에 비해 평균 이하의 지역에서 조건부 조절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 안정성의 경우, 평균 이하의 지역보다 평균 이상의 지역이 더 큰 조절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초혼과 동일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규모의 경우, 평균 이하의 50개 지역(대도시 2개, 중소도시 3개, 농어촌 45개)에서만 조건부 조절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 규모가 일정한 수준까지 커지면 결혼에 의한 출산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외국인과의 결혼은 재혼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역량, 주거 안정성, 그리고 지역 규모의 조절 효과 통계적 유의성과 조건부 조절 효과의 방향성이 재혼의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과 저출산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결혼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거주지 선택이 조절적인 영향을 지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결혼 부부가 거주지로 농어촌 지역보다는 중소도시 및 대도시로 선택할 경우가 출산 의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 원인을 저출산이라는 결과에 역점을 두고 설명하려는 이론적 시도보다는 잠재적 출산 인구의 거주지 선택적 의지와 관련된 이론이 더 현실적인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지방소멸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거시적 차원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해결 관점으로 광역화를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광역화는 균형발전, 자치분권 등과의 직접적인 언급 없이,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의 결과인 지방소멸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임을 강조한다. 특히, 현재까지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잠재적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과 더불어, 일부 농어촌 지역은 조만간에 지방정부를 구성하거나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에 본격적으로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현상을

지방소멸로 보는 것이 문제 해결 차원에서 더 적절한 개념일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자연적으로 인구가 완전히 소멸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지방소멸에 대한 미래의 대응적 노력을 가정할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이 이를 구체화하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대안은 비록 논란의 소지가 크더라도 고려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일본이 2000년 3천 20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을 2021년 1천 700여 개로 통합한 사례, 프랑스가 22개의 레지옹을 13개로 통합하여 광역화한 사례 등은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본 연구에서 결혼과 출산 간의 관계에서 거주지 선택의 조절 효과를 근거로 광역화를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현재의 결혼 부부 농어촌 지역으로서의 거주 회피 현상은 광역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도시 유형의 변수가 거주지 선택과 직접적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지방소멸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본 연구를 보완하는 후속적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1] K. Bassett and Short. J.R. Housing and Residential Structure, London: Taylor & Francis, 1980.
- [2] J. Huinink & M. Wagner, Regional Living Conditions, Migration and Family Formation,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Vol. 41, No. 4, pp. 669-689, 1989.
- [3] D. Courgeau, Interaction between Spatial Mobility, Family and Career Life-cycle: A French Surve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1, No. 2, pp. 139-162, 1985.
- [4] F. Michielin and C.H. Mulder, Family Events and the Residential Mobility of Coupl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Vol. 40, No. 11, pp. 2770-2790, 2008, doi.org/10.1068/a39374
- [5] M. Wagner & C.H. Mulder, Spatial Mobility, Family Dynamics, and Housing Transitions,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Vol. 60, pp. 111-135, 2015, doi: 10.1007/978-3-658-11490-9\_6
- [6] P. Feijten and C.H. Mulder, The Timing of Household Events and Housing Events in the Netherlands: A Longitudinal Perspective, *Housing Studies*, Vol. 17, No. 1, pp. 773-792, 2002, doi:10.1080/0267303022000009808
- [7] H. Kulu and A. Vikat, Fertility Differences by Housing Type: The Effect of Housing Conditions or of Selective Moves? *Demographic Research*, Vol. 7, pp. 775-802. doi:10.4054/DemRes.2007.17.26
- [8] H. Kulu, Fertility and Spatial Mobility in the Life Course: Evidence from Austria,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Vol. 40, No. 3, pp. 632-652, 2008, doi.org/10.1068/a3914
- [9] U. Lindgren, Who is the Counter-urban Mover? Evidence from the Swedish Urban System,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Vol. 9, No. 5, pp. 339-418, 2003, doi:10.1002/IJPG.296
- [10] G. Meil, Geographic Job Mobility and Parenthood Decisions, *Zeitschrift für Familienforschung*, Vol. 22, No. 2, pp. 171-195, 2010, https://nbn-resolving.org/urn:nbn:de:0168-ssoar-354926
- [11] H. Rüger, M. Feldhaus, K.S. Becker, & M. Schlegel, Circular job-related Spatial Mobility in Germany: Comparative Analyses of Two Representative Surveys on the Forms, Prevalence and Relevance in the Context of Partnership and Family Development, *Comparative Population Studies*, Vol. 36, No. 1, pp. 193-220, 2011, doi: https://doi.org/10.12765/CPoS-2011-05
- [12] J. Huinink and M. Feldhaus, Fertility and Commuting Behaviour in Germany, *Comparative Population Studies*, Vol. 37, pp. 491-516, 2012.
- [13] W.A.V. Clark, Life Course Events and Residential Change: Unpacking Age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Moving,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Vol. 30, pp. 319-334, 2013, doi.org/10.1007/s12546-013-9116-y
- [14] D. Courgeau, Migration, Family, and Career: A Life Course Approach. In P. B. Baltes, D. L. Featherman, & R. M. Lerner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ur* (Vol. 10, pp. 219-255). New York, NY: Lawrence Erlbaum.
- [15] H. Kulu and P.J. Boyle, High Fertility in City Suburbs: Compositional or contextual effect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Vol. 25, pp. 157-174, 2009.
- [16] W.A.V. Clark & D.S. Withers, Fertility, Mobility and Labour-force Participation: A Study of Synchronicity, *Population, Space and Place*, Vol. 15, No. 4, pp. 305-321, 2009, doi:10.1002/psp.555
- [17] H. Kulu & N. Milewski, Family Change and Migration in the Life Course: An Introduction, *Demographic Research*, Vol. 77, pp. 567-590, 2007, doi:10.4054/DemRes.2007.17.19